

한국현대미술의 체질강화를 위한 계기가 되기를

고충환 미술평론가

culture 'art

그동안 관 중심의 체제였던 한국 문화예술진흥원이 예술위원회로 개칭되며 동시에 민간 중심의 체제로 바뀌게 되었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문예진흥원 32년의 성과를 미술지원사업을 중심으로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를 계기로 그 동안의 문예진흥원의 성과와 업적 그리고 과오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이하 문예진흥원)이 금년 9월 28일자로 한국문화예술위원회(이하 예술위원회)로 개칭되고, 그 체제 또한 전면적으로 개편된다. 그러니까 관 중심의 체제였던 것이 민간 중심의 체제로 바뀌게 된 것이다. 문화관광부는 이를 위해 8월 10일 각 분야별 전문가 11명을 그 설립 위원으로 위촉한 바 있다. 각 위원의 임기는 3년이며, 위원장(문학 분야의 김병익)은 상임이며, 그리고 다른 위원들은 비상임이다. 미술관련 위원으로는 미술분야에서 김정현, 문화일반 분야에서 박신익이 각각 선출되었다. 예술위원회는 문예진흥원의 문예진흥기금 5,000억 원을 인수받게 되고, 더불어 진흥원이 매년 정부에서 받아온 복권기금 500억 원도 받게 된다(복권 기금은 향후의 그 지원 여부가 불투명한 것으로 밝혀져 이에 대한 대책 마련이 시급한 실정이다). 그리고 이 가운데 1,000억 원을 각 예술가와 예술단체에 지원하게 된다.

예술위원회는 이렇듯 창작주체를 지원하는 것은 물론이고 각종 문화예술관련 정책에 대한 수립도 도맡아 하게 된다. 그러니까 지금까지의 문예진흥원 체제가 말 그대로 예술진흥 중심으로서, 이를 실현하기 위한 각종 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이뤄졌다. 반면 예술위원회는 그 위상이나 업무 범위가 단순한 지원 체제를 넘어 문화예술 관련 정책을 입안하게 되고, 이렇게 채택된 사업을 실천하는 보다 실질적인 주체로서 자리매김 하게 될 것이다.

그러나 그 체제가 전면적으로 개편되었다고는 하지만, 예술위원회의 정체성이 문예진흥원의 정체성과 크게 다르지는 않을 것이다. 이전의 성과와 업적을 계승 발전시키는 한편, 그 동안의 과오를 반성하고 시정해나가는 형태가 될 것이다. 예술위원회 초대 위원장으로 선출된 김병익은 향후의 예술위원회

의 향방에 대해서 그 동안의 문예진흥원의 성과를 바탕으로 해서 혁신적인 과제를 풀어어나가는 형태가 될 것임을 밝힌 바 있다. 체제가 달라진 만큼 당연히 변화야 있겠지만, 그렇다고 해서 이전의 성과를 무위로 되돌리는 식의 급진적인 방식은 아닐 것이라는 말이다.

따라서 본 글에서는 그 동안의 문예진흥원 32년의 성과를 점검하고, 이를 바탕으로 해서 새롭게 출범하는 예술위원회의 과제와 방향을 제시해 보고자 한다. 이에 대해서는, 특히 예술위원회의 과제와 방향에 대해서는 사실상 체제전환이 논의된 초기부터 기회가 있을 때마다 각종 매체와 지면을 통해서 밝혀진 바 있다. 따라서 이 부분에 대한 논의는 기존의 논의와 크게 다르지 않을 것으로 보이며, 일정정도 이를 정리하는 형식이 되지 않을까 싶다. 그리고 이를 계기로 그 동안의 문예진흥원의 성과와 업적 그리고 과오를 되짚어보는 것도 의미가 있을 것이다.

한국문화예술진흥원 32년 - 미술지원 사업을 중심으로

본원(문예진흥원)의 미술지원 사업은 전시예술부문 지원 사업의 형태였으며, 이는 특히 전국적인 규모의 미술 행사를 지원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여기에는 대한민국 미술대전, 대한민국 사진대전, 그리고 대한민국 서예대전 등의 3대 국전과 함께 각 지방별 시·도 미술대전이 포함된다. 그러나 현재는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육성하는 채널이 많이 다양해졌다. 그러니까 최근 수년간 한국 미술관의 생리를 바꿔놓고 있는 각종 대안공간들이 이를 도맡는 실정이다. 그런가하면 청주국제공예비엔날레와 경기도도예비엔날레가 대한민국 미술대전 공예부문 공예대전의 위상을 대신하고 있으며, 최근 사진부문과 관련한 각종 괄목할 만한 성과들이 대한민국 사진대전의 존재를 무색하게 만드는 것이 현실이다.

이렇듯 각종 공모전들이 지금은 그 존재를 심각하게 논의해야 할 만큼 위상이 많이 위축되고 변질되었지만, 그 동안 이들 전시들이 신진작가를 발굴하고 등용하는 실질적인 관문으로서 어느 정도의 역할을 해왔음은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리고 각 지방별 시·도 미술

대전을 지원하는 것에 대해서는 지방화와 분권화를 측면에서 돕는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었지만, 이보다는 실효성 여부에 대한 회의 또한 적지 않았다. 이러한 지적은 본원으로 하여금 그 지원 방식을 역량 있는 신진지역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비중 있는 기획전을 활성화시키는 것으로 선회하도록 했다. 이와 함께 본원은 1995년 '미술의 해', 1998년 '사진영상의 해', 1999년 '건축문화의 해', 2001년 '새로운 예술의 해'를 맞아 이에 대한 관련사업을 별도 지원했다. 정부 차원에서 특정의 해를 지정하는 것은 문화예술 진작을 위한 풍토를 조성한다는 긍정적인 의미도 있겠지만, 이보다는 다분히 전시행정에 지나지 않는다는 비판도 없지 않았다.

그리고 본원은 1990년도를 기점으로 해서 관련 지원 사업을 시작한 이래 그 지원 건수가 50건을 넘어서게 된다. 이는 관이나 특정 단체(예컨대 미협 같은)가 주관하는 대규모 전시를 중점 지원하던 관행으로부터 벗어나서 그 지원 대상이 더 다양한 층으로까지 확대되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근래에 그 지원 건수가 오히려 줄어든 것은 생산적인 소수의 전시를 선정하여 집중 지원한 결과일 것이다. 적은 건수에 비해 상대적으로 증액된 지원 액수가 이를 말해준다. 이는 최근 들어 일각에서 논의되고 있는 바람직한 지원 시스템, 즉 선택과 집중에 맞춰진 지원 방식을 이미 본원이 실천해오고 있거나 적어도 의식하고 있었음을 말해준다. 그리고 수년 전부터 단체 전과는 별도로 우수기획전시를 선정 지원하는 사업 역시 이러한 변화와 그 맥을 같이 한다. 또한 수년 전부터는 우수개인전시에 대해서도 따로 선정기준을 마련하여 지원사업을 해왔다.

이처럼 본원의 미술관련 사업 지원은 무엇보다도 각종 전시 활동을 지원하는 형태였다. 더불어 각종 미술관련 학술행사도 본원의 중요한 지원 대상이었다. 이제 미술은 그런다는 행위를 설명해 주고,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각종 담론들은 단순히 미술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서 더 나아가 문화전쟁을 견인하고 유도하는 무기 아닌 무기와도 같은 것이다. 이런 현실에서 본원이

이제 미술은 그린다는 행위를 설명해 주고, 그 행위에 의미를 부여해 줄 수 있는 이론적인 뒷받침이 따라야 한다. 각종 담론들은 단순히 미술행위를 설명하기 위한 이론적 근거에서 더 나아가 문화전쟁을 견인하고 유도하는 무기 아닌 무기와도 같은 것이다.

Action

창작활동과 함께 학술활동을 지원 대상으로 본 것은 어찌 보면 당연한 것이었고, 체제가 바뀐 이후에도 이는 더 전문적이고 실질적인 지원이 가능한 형태로 강화되어야 할 것이다. 학술활동은 전문지와 자료집 발간, 각종 세미나와 심포지엄, 그리고 대내외적인 교류활동을 광범위하게 포함한다.

이와 함께 특기할 만한 사항은 각종 웹진과 웹 메일, 그리고 웹 아트의 운영 및 제작이 새로운 학술 지원 대상으로 등장한 점이다. 미술연구활동의 대상 영역이 지금까지의 오프라인 상의 아날로그 방식으로부터 온라인 상의 디지털 방식으로까지 확대된 것이다. 이는 그 지원 방식이 시대의 조류에 맞춰 변화해왔음을 말해준다. 이외에도 국제교류 활동 지원 사업과 관련하여 본원은 1995년에 정식 개관한 베니스비엔날레 한국관의 관리 및 전시 운영에 지속적으로 관여해 왔으며, 또한 1991년부터는 'PSI' 즉,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 한국작가 파견도 지원해왔다.

또한 본원은 그 산하에 있는 미술회관과 인사미술공간을 활용한 각종 기획전시를 통해 한국현대미술의 견인차 역할을 하기도 했다. 이들 중 미술회관이 처음에는 대관전과 기획전(자체 기획전과 외부와 공동으로 기획하는 기획전모전, 그리고 각종 국제교류전 포함)을 병행했었다. 자체수입원의 일환으로서 대관전 형식으로 운영된 것이긴 하지만, 이것이 본원의 위상과는 어울리지

않는다는 지적이 제기됨에 따라 이후 대관전을 폐지하고 기획전시 중심으로 그 체제를 전환했다. 미술회관의 이러한 체제 전환은 1999년 인사미술공간의 설립과 맞물리면서 그 위상이 더욱 강화된다. 특히 인사미술공간은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대안미술을 지향하는 새로운 창작발표의 장을 마련한 것이란 점에서 그 의의가 더 크다. 이는 본원의 존재 의미가 단순한 지원 시스템에만 머물지 않고, 더 나아가 현대미술의 모델을 제시하는 바로미터로서의 위상마저 실현하고 있는 경우로 보인다. 이는 예술위원회로의 체제 전환 이후에도 더 강화되어야 할 대목으로서, 그렇게 되리라 전망한다.

본원은 이외에도 열악한 환경에서 작업하는 작가들에게 창작공간을 마련해주기 위한 미술창작공간 지원사업, 신진작가들을 대상으로 한 각종 대안공간 지원사업, 미술문화로부터 소외된 계층들을 위해 찾아가는 혹은 참여하는 미술 지원사업, 열악한 환경에 처한 원로 작가들을 지원하는 복지 사업, 장애 미술인 지원사업, 대 국민 미술문화 교육 지원사업 등을 운영해왔다. 그 지원의 양상이나 범위가 실상 거의 모든 것을 포함할 정도로 광범위했던 것이다. 예술위원회의 체제 전환 이후에도 이러한 것들이 어떠한 식으로든 재정립될 것이며, 이는 산하의 각종 소분과위원회의 몫일 것이다. 여하한 경우에도 정당한 수혜의 권리와 기회로부터 소외되는 계층이 없도록 사업추진 과정에서의 공평성과 형평성을 받

회해야 할 것이다.

예술위원회의 과제와 방향

문예진흥원의 예술위원회로의 체제전환은 문화예술 진흥정책과 지원정책을 지금까지 정부가 주도하던 것에서 관련 분야의 전문가들이 주도하는 식의 민간 주도형으로 바뀐다는 점이 가장 두드러진 특징일 것이다. 이는 일단 예술인들이 다른 예술인들을 지원하는 민간자율기구를 실현하는 것이란 점에서 바람직해 보인다. 그러나 권한이 주어지면 당연히 책임도 수반되어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과연 책임 있는 운영이 가능하겠느냐는 우려의 목소리도 없지 않다. 그러니까 상임 진흥원장을 중심으로 한 1인 중심체제가 비상임 12인의 위원들을 중심으로 한 체제로 분산됨으로써 소신 있는 운영과 책임 소재라는 그 양면에서의 실효성을 염려한 것이다.

그리고 민간자율기구라고는 하지만, 사실상 국고로부터 기금을 지원 받는 기구가 과연 진정한 의미에서의 자율성을 확보할 수 있겠느냐는 우려도 있다. 이에 대해서는 정부는 지원은 하되 간섭은 하지 않는 분위기가 먼저 정착되어야 할 것이며, 이를 실현할 수 있는 실질적인 장치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더불어 위원회 측에서도 진정한 자율기구로서 거듭나기 위해 국고 이외의 기금을 조성할 수 있는 지속적이고도 실질적인 채널에 대한 방안을 모색해야 할 것이다. 이외에도 위원회는 위원회 산하에 각종 분야별 소분과위원회를 거느리는 형태로 구조화된다. 소분과위원회를 간에, 그리고 소분과위원회와 위원회 간의 원활한 의사전달 체계가 마련되어야 한다. 그리고 언제나 제기되는 사안이지만, 특정 경향에 치우친 편중 인사가 있어서는 안 될 것이다. 소위 코드 인사에 대한 시비가 다시 되풀이되어서는 안 될 것이라는 말이다. 그간 예술계에서는 소액다건주의에 바탕을 둔 자생력의 결핍과, 여전히 인맥과 학연에 의존한 지원편중 현상 등의 문제들이 제기되었다. 지원 받은 기금은 반드시 해당연도에 그 성과를 보여야한다는 경직된 발상이 완성도가 떨어지는 작품을 양산하는 계기로서 작용한 것



1995년 '미술의 해' 선포식 장면

도 사실이다. 이러한 소액다건주의를 지양하고, 대신 선택과 집중을 통한 전략적 배분으로 선회해야 하며, 행사 위주의 단발성 지원을 지양하고, 다년간 지속적인 지원 제도로 지원 방식이 바뀌어야 한다. 그리고 지원범위도 창작뿐만 아니라 유통과 소비에로까지 확대되어야 하고, 각종 탈 장르적이고 실험적인 예술에도 지원을 강화해야 한다. 지역주민들이 참여하는 공동체 문화를 활성화 한다는 점에서 이를 지원하는 것 자체는 문제가 없으나, 다만 그 실효성 여부와 함께 옥석을 가리는 일만큼은 선행되어야 한다. 특히 각 지역의 비영리 민간예술단체에 대한 지원 심의가 보다 실질적으로 이뤄져야 할 것이다. 실제로 지역문화, 공동체 문화를 명분으로 내세운 심의 대상 중 그 실체가 불분명하거나 내세운 만한 내용이 없는 경우가 적지 않다. 심지어는 처음의 심의 대상과 차후의 실적이 상당할 정도로까지 차이가 나는 경우가 평가과정에서 발견되기도 한다.

미술분야만 하더라도 총 10개가 넘는 장르가 있고, 이런 장르의 분화 현상은 차후로도 더 심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이가 문화환경이 눈에 보일 만큼 빠르게 변화하고 있는데 반해, 정작 지원시스템은 문화예술의 내용적이고 형식적인 변화들에 대해 능동적으로 대처하지 못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지원 대상에서 특정 장르가 소외되는 경우는 없어야 할 테지만, 그렇다고 탈 장르가 심화되고 있는 현실에서 틀에 박힌 구분법을 고집할 수도 없는 일이다. 그러므로 새로운 분류법을 개발하는 한

공정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각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작가의 관리까지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Process

편, 차후로는 아예 장르를 구분하지 않고 지원하는 방법도 심각하게 고려해봐야 할 것이다. 더불어 수도권과 지역 간의 문화적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강구되어야 한다. 적어도 문화향수의 측면에서 이를 보다 실질적으로 확대 적용해야 할 것이다. 최근 지원 형태를 보면 회원전과 동문전, 그리고 각종 그룹전과 연례전에 대한 지원을 지양하는 추세가 뚜렷하다. 그러다 보니 신진작가들에 비해 성격 있는 기획전에 참여할 기회가 없는 기성작가들이 지원대상으로부터 소외되는 현상이 눈에 띈다. 그런 견지에서 기성작가와 신진작가의 지원 불균형 현상을 해소할 수 있는 방안이 마련되었으면 하는 바램이다.

지원대상은 무엇보다 그 환경이 절대적으로 열악한 기초예술분야(소위 순수미술)에 집중되어야 한다. 기초예술분야는 마치 학문에서의 인문학과도 같은 것이어서 생산보다는 투자를, 그리고 성과보다는 토양을 다진다는 식의 인식전환이 요청된다. 또한 창작과 함께 학술 분야에 대한 지원도 더 강화되어야 한다. 각종 유관 학술단체들이 사실상 수입원이 전무한 실정이다. 무조건적인 지원은 피해야 할 테지만, 이미 상당정도의 이력과 더불어 자기 정체성을 확보하고 있는 단체에 대해서는 미술계의 체질을 강화한다는 측면에서 지속적인 지원이 이뤄져야 할 것이다. 단기적인 성과를 보고 지원하기 보다는 장기적인 플랜을 가지고 이뤄지는 프로젝트형

사업을 집중 선별 지원해야 한다. 나아가서는 위원회 측이 이런 장기적인 플랜을 구상하고 이를 공모의 형식을 빌려 제시하는 것도 한 방안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이런 장기적인 플랜과 관련하여 아카이브 구축에도 지원사업이 이뤄져야 한다. 기록과 보존 지원 사업은 장기적으로 미술교육인프라를 구축하고, 이를 공고히 한다는 점에서 창작 지원사업과 함께 위원회가 운영하는 지원사업의 한 축이 돼야 한다.

작가들이 창작활동을 전개하는 환경은 전에 없이 다변화되고 있는 실정이며, 이를 심의에 반영해야 한다. 말하자면 전시는 물론이고 국내외의 각종 장, 단기 연수 프로그램을 지원대상에 포함시켜야 한다. 그리고 공정한 지원이 되기 위해서는 현재 세계 각처에서 운영되고 있는 이들 프로그램에 대한 정보가 선결되어야 하고, 이를 기준으로 지원대상을 가려낼 수 있어야 한다. 그리고 프로그램 지원에 그치지 않고 사후 작가의 관리까지도 아우르는 방향으로 추진되어야 할 것이다. 일단 지원이 결정된 사업에 대한 사후 평가도 그 시스템이 더 전문화되고 더 정교해져야 한다. 예술위원회의 자체 연구기능과 전문성을 확보 강화해야 하고, 이와 함께 각 사업의 진행 과정과 성과는 날날이 DB로 구축 보존해서 그대로 문화적 자산으로까지 이어져야 한다.

이외에도 미술계에는 각종 사안들이 산재해 있고, 차후로 소분과위원회가 이 사안들을 전담하거나 적어도



1995년 <국제스튜디오프로그램 참가작전> 포스터

직접 간접으로 영향을 미칠 것으로 본다. 즉 새로운 예술정책의 수립과 미술대전의 정체성 문제, 공공조형물과 건축물미술장식품 문제, 올해의 예술가상과 미술은행제도의 운영 문제 등이 그것이다. 이 사안들 중 대부분은 각 주체간의 이해관계가 첨예하게 맞물린 것들인 만큼 그 추진과 집행과정에서의 잡음을 최대한 줄여야 할 것이다.

이 가운데 특히 공공조형물은 그 동안 공공연하게 비리의 온상으로 불려질 만큼 문제가 많았던 것이 사실이다. 이에 대해서는 유관 주체들 간의 협의와 함께 공공자산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선결돼야 한다. 체제 정비와 더불어 그 과정에서의 형평성과 공정성은 물론이고, 시민이 자발적으로 주인의식을 가지고 참여하고 공감할

수 있는 수준 높은 작품이 설치될 수 있는 전기를 마련해야 한다. 또한 예술축제의 형식을 띠고 있는 올해의 예술가상은 비록 올해 처음으로 제정되었지만, 그 주체로 보나 권위로 미루어 볼 때 사실상 모든 국내 미술상제도의 벤치마크로 자리가 매겨져야 하고, 또 그렇게 될 것으로 보인다. 세계 미술의 흐름과 그 맥을 같이 하면서도 그 권위를 인정받을 수 있는 수상제도로 키우기 위해서는 향후 그 정체성을 어떻게 가져갈 것인지에 대한 집중적이고도 심도 깊은 논의가 이뤄져야 한다.

최근 심의과정에서 드러난 한 특징을 보면, 신진작가들의 지원과 함께 각종 대안공간이 그 지원대상으로서 새로이 등장한 점을 들 수 있다. 이와 관련하여 그 혜택이 소위 일부 선발주자들에 편중된 감이 없지 않다. 대안공간의 사정도 처음과는 많이 달라졌으며, 또한 일부 대안공간의 경우에는 외부로부터의 지원을 필요로 할 만큼 그렇게 열악하지도 않다. 그런가하면 현재 대안공간이라는 말이 무색할 정도로 대안공간을 표방하는 많은 공간들이 새로이 생겨나고 있는데, 이는 대안공간 및 대안미술의 성격이 비교적 뚜렷하게 반영되면서도 정작 지원으로부터는 소외돼 있는 경우를 가려내야 할 필요성을 느끼게 만든다. 이외에도 지원이 특정 단체에 편중되지 않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하고, 또한 각 단체간의 형평성 문제도 고려해야 할 것이다.

일은 시스템이 한다는 말이 있다. 그런 점에서 관 주도로부터 민 주도로의 체제 변화는 분명 바람직하고도 생산적인 일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결국 그 시스템을 운영하는 주체는 사람이며, 그 사람이 일을 하게 마련이다. 그런 점에서 무엇보다도 위원회 구성 주체와 이들을 바라보는 미술계 사람들 간의 신뢰가 요청된다. 우려와 곡절 속에서도 처음의 플랜대로 체제전환을 이뤄냈다. 부디 처음의 의욕을 원동력 삼아 체제전환이 체질강화로 이어지기를 바라며, 그렇게 되리라 본다.

